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성 북 구 의 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44
----------	-----

발의연월일: 2023년 6월 26일
발 의 자: 이호건 외 11인

1. 주 문

- 일본정부가 계획 중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우리나라의 바다생태계 파괴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물질 관련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오염수 방류 결정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국 중심주의적인 행태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시 철회할 것과,
-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국민 안전 수호와 해양환경 피해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

3. 결 의 안: 붙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및 대응 촉구 결의안

-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인 고준위 오염수에 대한 방류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이르면 6월부터 해저터널을 통해 태평양으로 방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안전성과 과학성 면에서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항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1만 8천 베크렐, 식품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되어 지구촌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그동안 원전 오염수에 대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고 일방적인 조사와 분석만으로 안전하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어 신뢰성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 안전성이 미확보된 오염수 방류는 투기에 불과하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핵폐기물을 바다에 불법 투기하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주변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문명적 범죄이다.

- 특히 방류된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해양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수산물 소비 감소, 양식장 피해 등 우리나라 수산업과 어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 하지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위험성을 지적하거나 어떠한 중단 요구도 없이 방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로 인해 국내 해양 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행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와 일본산 수산물을 포함한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단속을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여 일벌백계의 자세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일본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 전체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물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성 검증 등의 과정에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검역 관리 및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국내 해역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유입 검사 강화 등 국민의 생명과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일동